

중국 시안봉쇄 실상 폭로 '장안 10일' 전면 삭제돼

제2의 '우한 일기'로 주목
옹호·관련 글도 블라인드

작년 말부터 봉쇄된 인구 1,300만의 중국의 대도시 시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당국이 아닌 시민의 시선에서 전한 글인 '장안(시안의 옛 명칭) 10일'이 전면 삭제됐다.

이 글이 중국 안팎에서 제2의 '우한 일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 내 불만이 고조될 기미가 보이자 중국 당국이 결국 자국민의 눈에서 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프랜져 기자 장쑤가 자신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서 쓴 '장안 10일' 원문이 차단됐다.

장쑤의 계정을 구독 중인 이용자가 이 글을 누르면 '공개 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법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위챗 관리 규정에는 "공식 계정 이용자는 돌발 사건을 이용해 극단적 정서를 선동하거나 (정부·사회) 조직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챗 공식 계정 서비스에서 9일 현재 장쑤의 계정이 통째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이용자가 다는 장쑤의 계정을 찾아가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위챗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퍼나른 글 등 '장안 십일'에 관련된 글들이 대부분 삭제됐다. '장안 십일'이 혼란을 선동한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글들은 남아 있다.

중국 내 논란 속에서도 '장안십일'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시진 전 환구 시보 편집장의 글도 삭제됐다.

후 전 편집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이 좋든 싫든 '장안 10일'과 같은 표현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국 인터넷에서 단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유력 언론 매체 탐사보도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5년 프랜져 기자로 전향한 장쑤는 지난 4일 자신이 도시 전체 봉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안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장안 10일'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시안 시민들이 도시 전면 봉쇄 속에서도 당국의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선전해왔던 '장안 10일'은 당국의 우격다짐식 격리 속에서 먹거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다.

장쑤의 글은 중국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제적으로도 '제2의 우한 일기'로 주목을 받았다.

'장안 10일' 반향 확산은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중국식 '제로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당국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장쑤는 '장안 10일'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말은 좋지만 여기서 우리(시안 사람들)는 '우리'인지 '감당해야 할 대가'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일갈하면서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중국 내의 보편적 사고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극도로 경직된 방역 정책 탓에 병원 문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가 유산하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중국 부총리까지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앞두고 사회 안정 도모가 절실한 중국 당국은 '시안 사태'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장안 10일' 삭제에 일부 중국인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서 "모든 작은 인물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는 모두 작은 인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장안 10일'이 없다면 누가 작은 인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 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극도로 경직된 방역 정책 탓에 병원 문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가 유산하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중국 부총리까지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앞두고 사회 안정 도모가 절실한 중국 당국은 '시안 사태'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극도로 경직된 방역 정책 탓에 병원 문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가 유산하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중국 부총리까지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앞두고 사회 안정 도모가 절실한 중국 당국은 '시안 사태'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도시 낭트에서 시민들이 백신 증명서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백신패스 반대 시위 10만명 집결

"미접종자 성가시게 만들겠다"
마크롱 발언에 분노 표출도

프랑스에서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주말인 지난 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0만명 이상이 시위를 벌였다고 BBC가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역에서 10만 5,000명 이상이 백신 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주 전쯤인 지난달 18일 진행됐던 시위에 비해 네 배로 늘어난 규모다. 당시 참가인원은 약 2만 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가 백신 증명서를 통해 그들의 자유를 짓밟고 시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백신 증명서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신을 맞아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선택권을 없애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법안은 사흘간 이어진 진통 끝에 6일 첫 입법 관문인 하원을 간신히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시위자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일간 르피리시앵 인터뷰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성가시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는 약 1만 8,000명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우리가 당신을 열받게 하겠다"고 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시위가 격화한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프랑스 내무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격해지면서 34명이 체포되고 경찰 1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 유혈사태 해법
올해 말까지 휴전선언 연장
'실효성 없다' 지적 불가피

미얀마 유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군사정부와 올해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올해 말까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을 상대로 휴전 선언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전혀 이행되지 않은 선언을 되풀이한데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를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민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전날 밤 공동 성명을 내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AOs)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휴전 선언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또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의 휴전 협상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채택한 5개 합의사항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갈등 완화 및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는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재작년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무력을 동원해 반군부 세력을 탄압해왔다.

이에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해 9월말 갑자기 성명을 내고 올해 2월까지 모든 소수민족 반군을 상대로 5개월간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카렌민족연합(KNU)과 카친독립군(KIA) 등 소수민족 반군과 미얀마군의 무장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연초부터 생활비 상승 쓰나미 예고

물가 상승률 7% 추정

영국이 가계 에너지 요금이 50% 넘게 뛰는 등 생활비 상승 쓰나미가 물려올 것이라 전망에 연초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물가 상승률이 5%가 넘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4월에 에너지 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까지 겹치면 생활비 급등 위기가 겹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8일(현지시간) 2022년은 생활비 위기의 해로 정의내린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더 타임스는 가스·전기시장 규제기관인 오프렘(OFGEM)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새로운 에너지 요금 상한이 지금보다 50% 이상 높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가계 전기와 가스 평균 요금 상한(Cap)은 현재 연 1,277파운드(208만원)에서 약 2,000파운드(326만원)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상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작년 10월에도 상한이

12%나 올랐다.

영국 정부 내부에서는 4월에 에너지 요금이 뛰면 물가 상승률은 7%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더 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영란은행이 최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먼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모기지 금리도 오르고 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 비용 충당과 국가 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지원 등을 위한 세금 인상을 예정했다.

가디언은 특히 에너지 요금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다음 주 초 에너지 요금 위기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